

| 노사정대표자회의 |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다루기로 합의

공공부문, 금융, 보건의료, 해운 4개 업종별위원회 설치도 의견 모아

이세종 전문위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박태주 상임위원(간사)은 10.12.(금) 14: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네 번째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표자회의는 지난 4.23.(화) 3차 회의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린 회의였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들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다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와 4개 업종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데 합의했다. 합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결과〉

- ▶ 금융·해운·보건의료·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위원회를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족
- ▶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설치·운영키로

2018년 10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지난 8월 2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도출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을 의결하고,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

둘째, 업종별위원회와 관련하여 금융, 해운,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4개 업종별위원회를 '18년 10월부터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노동계가 제안한 버스운수·자동차·조선·철강·민간 서비스(유통)·건설·전자·제조업·사회서비스(요양)·화물운송·공무원 등은 관련 노·사·정 간 합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셋째,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한다.

넷째, 확대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계층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한다.

다섯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오늘 제4차 회의를 마치며, 노·사·정 대표자들은 최근 일자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8년 10월 1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본격적인 안건 논의와 합의 도출에 앞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난 1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합의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오늘에서야 대표자회의가 다시 열렸다.

4개월 동안 기승전'최저임금'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한 기승전'사회적 합의'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어떤 문제라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만들어내라는 국민들의 강한 바람이 있다.

이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체제를 마감하고, 우리가 마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켜

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정말 경제가 어렵다. 부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과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미래의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위한 집단적 지혜가 절실하다.

큰 계획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작은 논의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기존 의제별위원회 진행상황과 함께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셨다.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서로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긴 멧힌 것을 풀어내고 협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대표자 회의가 오랜만에 개최가 되는 만큼 이제는 정상궤도에 올려서 결실을 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완전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기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 오신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금년 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완전히 안착하길 기대한다.

모든 주체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체계 전환을 마냥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면 사회안정, 노동법 개정문제, 그리고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의 골든타임이 늦어질 것이다. 이제는 사회적 대화가 ‘개문발차’까지 생각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힘을 쏟아야 될 시기라고 재차 강조하고 싶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 복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지난 8.21.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한국노총과 확약한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에서 후퇴할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간에 신뢰들이 쌓여 사회적 대화가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물며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기재부에도 쓴소리를 하고 싶다. 공공부문에서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해야 될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신뢰를 쌓는 데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해주기를 요청 드린다.

경제민주화가 없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민주주의를 매우 후퇴시킬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본집중과 경영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좀 더 활성화되고 노사정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사회통합의 계기를 갖기를 희망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5개월여 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새로 오신 이재갑 장관님을 환영하며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또 오늘 국민연금 관련 안전을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신 복지부 박능후 장관님께도 감사드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적인 출범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실무회의체에서는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공식적인 출범 후에는 더욱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고용통계 발표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은 물론 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오늘 모인 여러 주체들이 서로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목표는 같다.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은 사회적 대화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대표자들이 여기 모인 이유다. 경총과 우리 경제계는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5개월여 동안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대표자회의의 속도를 높이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민주노총이 비웠던 기간만큼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다음 주에 민주노총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여부에 대해 대의원들의 조직적 의견을 묻는 중요한 토론과 결정을 앞두고 있다. 어깨도 매우 무겁고 언론을 통해서 또는 현재 조직적 모임 속에서 그리고 또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참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만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함께 하는 동지로서 김



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동지들, 그리고 사용자와 정부 대표님들, 항상 고군분투 하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님과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갈 때만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한다.

첫 번째는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 주요한 사회개혁의 요구를 가진 의제들로서 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산업 업종 단위의 노사 중심성을 가지고 업종별위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또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정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조치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해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

또한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의 대책을 논의할 구조조정대책특위를 설치할 것을 저희들이 요청 드리고 있기에 산업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함께 찾으면서 노사정이 역할을 높여가기를 바란다.

둘째,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명칭도 분명히 하고 논의할 의제도 분명히 만들어내는 이른바 국민연금의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초점을 분명히 하고 논의를 했으면 한다는 요청이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반 보, 한 보 조금씩 나아가려 하고 있다. 그러기에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님들께도 요청 드린다. 경사노위 참여를 하면서 바로 국제규범에 맞게 이제 우리 사회의 ILO 협약에 대한 비준과 관련된 노동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구조조정과 관련된 점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한 전향적인 그러한 협상과 대화를 나누기를 요청 드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대표 자회의에 특별위원으로 오늘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취약계층 소득보장과 연금계획 관련하여 특별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먼저 지난 8월 21일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에 합의를 보여준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한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작게나마 이루어주신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큰 빛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포용적 복지를 위한 소득과 의료, 돌봄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로서 특히 오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한다.

이 위원회에서의 논의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드는 데 근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 안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보건복지부도 이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의소 회장

5개월 만에 대표자회의에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또 작기는 하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 우리 경제의 기회 확대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 대단히 반갑게 생각한다.

한편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여전히 많다. 세계경제가 정점을 지나서 이제 둔화가 시작되



었다는 우려가 있다. 또 미국,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아직도 끝없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져 있다. 여기에 내수부진 또 양극화 문제 등 국내 문제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아직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긴 호흡을 갖고 구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인구구조의 변화, 또 낮은 산업경쟁력,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국가적인 역량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저희 경제계도 인식을 같이 한다.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틀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발전방향을 논의해 가기를 기대한다.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특별히 참석하신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생존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고, 또 이를 넓게 보면 일자리와 구조적 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은 절차 등에 속도를 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얼마 전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일자리 문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지

금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발표된 고용동향을 보면 당초 우려한 것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인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일자리 상황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힘들어지는 분들은 취약한 여건에 놓여있는 노동자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 혼자 하기는 어렵고 우리 노사정이 모여서 함께 해법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대화를 보면 노사 신뢰 회복과 의제별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과와 결실을 거둬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나 노동권 신장 같은 과제들은 노사 간의 이견이 첨예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다음 달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름으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계층별위원회도 조속히 가동되어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이 스스로 의제도 개발하고 정책 제안도 할 수 있는 틀도 빨리 갖춰가기를 바란다.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마련되기 위해서 우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

다음은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가진 기자단 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이다.

국민연금을 사회적 대화로 풀기로 했는데, 논의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언제 출범하나?

(박태주 상임위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위로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단체들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하되 더불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기타 연금들도 노후소득 보장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말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운영 개혁방안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특위의 논의내용을 반영,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 관련해서는 10월 17~1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참여로 순조롭게 결정되면 11월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문성현 위원장) 국민연금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기로 한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최대한 논의사항을 전달하겠다. 경사노위 출범은 가능하면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완전체'로 출발하는 것을 국민들이 희망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늦었지만 민주노총이 국민의 바람대로 꼭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개혁방안 논의의 결과가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 건지? 소득대체율 같은 것도 권고를 하는 것인가?

(박태주 상임위원)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도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 또는 국회에 합의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다.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논의의제는 특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계층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속히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논의상황은

(박태주 상임위원) 시행령에 따르면 6개의 계층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노동 쪽은 비정규, 여성, 청년이고 사용자 쪽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일시에 구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순서를 정한다면 노동 쪽부터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6개 계층의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나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논의상황은

(박태주 상임위원) 민주노총이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위 그리고 구조조정 특위의 구성을 올 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한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구조개혁 특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정도까지 진행됐다.

복지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10월까지 내게 되어있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권고안을 연 기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배경은?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다룬다면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박태주 상임위원) 복지부 장관께서 하신 이야기는 10월 중에 제출되어 있는 국민연금 운영 개혁안을 국회가 양해준다면 특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해한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을 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가에 대한 대답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연금 기여 당사자는 노사가 핵심 계층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양대 노총이 공통으로 국민연금 논의를 경사노위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서 경제단체들과 정부도 동의한 바 있다. 노동계의 제안과 경영계의 호응이 경사노위 의제로 채택된 핵심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오늘 1차 준비위원회가 열리면서 구성 과정 중 전문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논의 사항이었다.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다양한 단체들, 특히 수급자와 지역가입자들, 그리고 청년세대들,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전문가의 참가도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다.

(문성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논의와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을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노사라고 생각한다. 기업중심에서 노사가 많은 것을 해왔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100개가 넘는 안건이 제출되는 것도 개별노사 단위에서 조절하고 합의를 해왔다. 국민연금의 문제도 풀어야 하는 것이 많지만 노사가 분명히 이 문제를 다루는 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복지부의 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위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박태주 상임위원) 연금개혁특위를 발족키로 하면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본다.



복지부가 별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나 TF를 만들지 않고 경사노위에서 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ILO와 관련해서 10월까지 합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타임스케줄이 있는지? 혹은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어떤 일정이 있는지?

(박태주 상임위원) 복지부에서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나 TF팀을 꾸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ILO 핵심협약과 관련해서는 연내 비준을 목표로 해서 사전적으로 관련되는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정이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논의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그 논의의 대상, 아젠다에 대해서까지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4개 우선 업종 기준이 무엇인가?

(박태주 상임위원) 양대 노총이 제안한 순서대로 논의해 왔고, 이해당사자 간 구성하기로 합의한 부분부터 구성한다고 한 그 원칙 속에서 오늘 4개 업종을 선정했다.